

보도해명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09. 12. 2(수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9. 12. 2(수)	담당부서	예산실 복지예산과 국토해양예산과 세제실 조세분석과
담당과장	안도걸 과장(2150-7210) 정기준 과장(2150-7330) 김종열 과장(2150-4310)	담당자	이재훈 서기관(2150-7211) 육현수 사무관(2150-7335) 박경찬 사무관(2150-4314)

제목: 4대강 추진으로 민생예산이 줄지 않았으며, 오히려 최대규모로 지원
- 4대강과 민생예산 보도관련(MBC PD수첩, 2009.12.01)

<연론보도 내용>

□ MBC PD수첩은 「4대강과 민생예산」이라는 제하로

- ① 복지예산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공적연금·주택 등 자연증가분이 5.8조원으로 대부분이고,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서민들을 위한 재량적 지출은 감액되었으며,
- ② 4대강과 관련해 내년 예산이 3.5조원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나, 농식품부 등의 사업비와 수공사업비를 합하면 8.5조원에 달하며,
- ③ 감세조치와 관련해 약 90조원의 감세로 지자체의 재정사정이 악화 되고, 국가채무가 증가된다고 보도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연증가분이라고 지적한 공적연금·주택 등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사업으로 이를 제외하고 복지예산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,
- 내년도 복지예산 증액분 6.4조원중 공적연금·주택 등은 제외하더라도 완료사업·자연감액 사업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증액된 사업들의 규모는 4조원 수준임

○ 감액된 사업들의 경우에도,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*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는 사업이며, '10년에도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며, 필요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대응할 것임

* 경제위기에 대응해 금년에 한해 중앙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지원

- 집행실적이 부진한 장애아동 무상보육 등은 감액조정하고,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한시생계보호 사업 등은 경제지표가 호전됨에 따라 정상화하였음

* 일시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'09년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안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'09년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적정

□ '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규모는 국토부 소관으로 6.7조원이며, 이중 재정이 3.5조원, 수자원공사가 3.2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기 발표하였음

○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등과 농식품부의 저수지 증고 등의 사업은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며, 4대강 사업을 위해 신규로 재원이 소요 되는 사업이 아님

□ 감세와 관련해서는,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소득세·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추진하였으며,

○ 지난해 추진한 감세 및 정부지출 확대 등 선제적 재정정책은 올해 경제안정에 기여하였으며(IMF평가단)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임

○ 감세를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, 일자리가 생기면 저소득·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에서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임

□ 감세규모와 관련해 90조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'08년 세제개편의 세수 효과만을 5개년간 누적한 것으로 과대평가 되어있고

○ '09년 세제개편시 추진한 증세조치를 반영할 경우 '08년 및 '09년 세제개편의 '08~'12년간 감세규모는 60조원 수준임

○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누적법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나, 정부가 발표하는 전통적 방식(순액법)으로 추정할 경우 '08년 및 '09년 세제개편의 총 감세규모는 '08~'12년간 23.4조원 수준이며,

- 이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규모는 5년간 3.5조원 수준에 불과하고, 특히 '10년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세 지방이전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오히려 0.4조원 증가하였음
-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,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의 재정 지원규모에 있어서도, '10년도에는 '09년 수준 이상이 유지되었으며,
 - * '10년 지방재정지원규모(교부세(금)+국고보조금+지방소비세) : 90.2조원
→ '09년 본예산 대비 +0.8조원, '09년 추경대비 +1.3조원
- '10년에도 '09년 교부세(금) 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지원(364억원)을 지속할 계획임
- 아울러, 인천공항 매각은 민영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감세 및 4대강 추진 등과는 무관하며, 보도에서는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매각대상자는 확정된 바 없음
- 그 외 민생예산 및 4대강 관련 세부 해명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

기획재정부 대변인

별첨 1 민생예산 보도 내용별 해명

1. (방송내용) 내년도 복지예산 증액분 6.4조원 중 사회보험의 자연증가분 3조원과, 보금자리주택 증가분 2.6조원을 차감하면 실제 복지예산은 0.8조원 증액에 불과

□ 4개 사회보험의 내년도 총증액분은 2.9조원*이며, 보금자리주택 증액분은 (6.2 → 8.8조원, +2.6조원)은 2.6조원임

- * 공적연금 급여지출 : +2.2조원 (19.5 → 21.7조원)
- 기초노령연금 +0.3조원 : (2.4 → 2.7조원)
- 건강보험 국고지원 : +0.2조원 (5.2 → 5.4조원)
- 실업급여 : +0.2조원 (3.3 → 3.5조원)

○ 내년도 전체 복지예산 증액분 6.4조원(74.6 → 81.0조원)에서 상기 증액분 5.5조원을 제외하면 0.9조원이나,

⇒ 내년도 완료사업(△0.3조원) 및 자연감액사업 등(△2.7조원)을 감안할 경우, 나머지 복지지출의 실제 증액규모는 3.9조원*임

- * 【주요 증액내역】
- . 기초생활보장급여 +0.1조원 (6.9 → 7.0조원)
- . 희망근로 +0.4조원(신규), 중증장애인연금 +0.1조원(신규)
- . 영유아 보육료 지원 +0.3조원 (1.3 → 1.6조원)
- . 노인장기요양보험 +0.1조원 (0.2 → 0.3조원)
- . 신종플루 대책 +0.1조원 (0.01 → 0.64조원)
- . 응급의료기반 확충 +0.1조원 (0.04 → 0.17조원)
- . 보훈 +0.2조원 (3.4 → 3.6조원) 등

(조원)

	'09본예산(A)	'10예산(안)(B)	증액(B-A)
【복지 지출】	74.6	81.0	6.4
○ 4개 사회보험	30.4	33.3	2.9
○ 보금자리주택	6.2	8.8	2.6
○ '09 완료사업	0.3	-	△0.3
○ '10년 자연감액사업 등	12.6	9.9	△2.7
○ '09.'10년 동액사업	2.6	2.6	-
○ 기타 증액사업	22.5	26.4	3.9

□ 자연증가분으로 분류된 항목도 실제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

①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 확대(364 → 375만명, +11만명) 외에 단가도 인상(88 → 91천원, +3천원)함으로써,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

② 건강보험도 국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내년에 보장범위를 확대*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게 됨

* '10년도 보장성 확대계획(연간 6,600억원 규모) : (i) 심장·뇌혈관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10%에서 5%로 경감, (ii) 항암제·희귀난치치료제·장애인보장구·MRI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, (iii)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 확대(20 → 30만원)

③ 실업급여의 경우 내년에는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, 통상적인 자연증가분을 상회하는 예산*을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반영

* 고용보험 구직급여 증액분 4,300억원(2.9 → 3.4조원) 반영내역 : 집행증가율·최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자연증가분은 2,000억원 수준, 나머지 2,300억원은 고용의 경기후행성 등을 고려한 추가 증액분

□ 한편, 보금자리주택 공급 사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생계안정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지출이며

○ 주택부문은 과거정부인 '05년*부터 복지분야로 분류되어 왔음

○ UN의 정부기능 분류기준(UN COFOG)에서도 주택비용 충당을 위한 사회보호급여, 저가주택·공공주택 제공을 복지기능으로 분류

* UN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(UN 정부기능 분류)

□ 내년도 복지예산에서는 의무적 지출이나 주택지원도 늘었지만, 여타 정책적·재량적인 복지지출도 최대한 반영하였음

①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 및 탈수급 촉진

▪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'09년 본예산(158.6만명) 보다 4.6만명 늘어난 163.2만명('09추경 수준) 반영 (6.9 → 7.0조원)

▪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고통분담* 속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금 단가를 5% 인상 (2.5 → 2.6조원)

* 내년도 공무원임금 동결, 최저임금 2.75%('98년 이후 최저수준) 인상

▪ 탈수급이 가능한(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 이상인) 기초수급자에게 3년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월 30만원(3년간 총 1천만원)의 자립자금 적립 지원 (희망키움통장, 249억원)

▪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

-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 연장 시행 (10만명, 0.4조원)

- 기초수급자들의 자활근로 확대 (4.8만명, 2,899억원 → 6.5만명, 3,984억원)

- 노인·장애인 일자리 확충 (167천명, 1,370억원 → 180천명, 1,481억원)

②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활지원 확대

▪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, 최저생계비 150% 이하 33만명에게 월 9~15만원 지급 (신규 1,474억원)

▪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(25천명, 1,124억원 → 30천명, 1,348억원) 및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(1.8만명, 305억원 → 3.7만명, 508억원) 지원 확대

③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 확대

▪ 소득하위 70%이하 둘째아부터 무상보육 실시(5만명 추가수혜, 156억원),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(18천명 추가수혜, 96억원) 등 보육료 지원 확대 (1.3 → 1.6조원)

▪ 맞벌이 부부·한부모 가족 등을 위해 24시까지 근무하는 야간보육교사 확충 (5천명, 361억원 → 6천명, 408억원)

▪ 중산·서민층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보육시설 환경 개선비 신규 지원 (개소당 1천만원, 300억원)

▪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(신규) 시술비 지원 확대 (121 → 254억원), 저소득 치매노인에게 월 3만원씩 약제비 신규 지원 (67천명, 67억원)

④ 국민보건 인프라 확충

▪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(추가 500만명분, 550억원),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 설치 등 응급의료기반 확충(391 → 1,741억원)

▪ 첨단의료복합단지 본격 조성(63 → 872억원), 보건의료 R&D 투자 확대 (2,774 → 3,077억원) 등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

2. (방송내용) 재량적 복지예산 감액 편성

- ① 결식아동 급식 지원예산 541억원 전액 삭감
- ②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3억원 전액 삭감
- ③ 한시적 생계보호 4,181억원 전액 삭감
- ④ 장애인 LPG 지원예산 전액 삭감
- ⑤ 기초생보급여 △649억원 삭감
- ⑥ 긴급복지 △1,000억원 삭감
- ⑦ 사회적 일자리 예산 △340억원 삭감
- ⑧ 노인 일자리 예산 △190억원 삭감
- 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△1,100억원 삭감
- 실직가정 대부예산 △3,000억원 삭감
- 기초.차상위 의료비 지원예산 △880억원 삭감
-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예산 △50억원 삭감
-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예산 74% 삭감 (75 → 20억원)
- 5년내 저상버스 50% 확보를 위해 내년에 1,800억원이 필요하나 325억원만 반영

□ 내년에 4%대의 성장세*가 전망되는 한편,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현 상황에서

* OECD(11월) 4.4%, KDI(11월) 5.5% 등

○ 정부는 예외적인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증액한 사업들은 당초 약속대로 종료하거나 정상수준으로 감액하는 대신

○ 여기에서 절감된 자원 등을 활용하여,

-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 및 탈수급 촉진
-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활 지원
- 저출산.고령화 대응투자
- 국민보건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

⇒ 이에 따라,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를 역대 최고수준*으로 편성

- * 복지지출 증가율 8.6%는 총지출 증가율 2.5%에 비해, 3배 이상 높은 수준
- *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도 금년의 26.2% → 27.8%로 확대

《 항목별 사실관계 》

【①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전액 삭감】

- 동사업은 '05년부터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
 - 금년에 한해, 경제위기 발생으로 예년수준(29만명)을 초과하는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지원
 - * '09년 겨울.여름방학 16만명분 432억원 → '09본예산 반영
 - * '09년 여름방학 추가 결식아동 9만명분, 109억원 → 예비비.특별교부금 지원
-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내년도 소요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며
 - * 지자체 급식지원 예산(안) : 2,333 → 2,764억원, 증 18.5%
- 필요시 정부차원의 별도 대책도 마련하여, 밥을 굶는 어린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

【②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 삭감】

- 에너지보조금은 작년 유가가 140불을 상회하는 비상상황에서 1년간 ('08.7월 ~'09.6월) 한시적으로 도입한 사업으로
 - * 에너지보조금 : ('08추경) 1,392 → ('09본예산) 903억원 → ('10안) -
- 국제유가가 70불대로 안정된 현상황에서는, 당초 계획대로 1년간만 지원함이 바람직
 - * Dubai (\$/b) : ('07말) 68.4 → ('08.8.7일) 141 → ('08말) 94.3 → ('09.10월) 73.2
- 기초수급자에 지원되는 최저생계비*에는 광열비(5.4%, 7.3만원)가 기포함
 - * ('10년) 4인가구 기준 136만원/월
-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탄에 대해서도 연탄보조 별도 지원 중 (차상위 이하 7만가구, '10년 142억원)

【③ 한시생계보호 전액 삭감】

- 당초 계획대로 금년말로 사업을 종료하되,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**극빈층 보호**를 위한 **안전망 확충**을 위해
 - **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**를 금년 실적 수준(10월말 157.1만명) 보다 약 6만명 늘어난 **163.2만명**(추경수준)으로 확대 반영

【④ 장애인 LPG 지원예산 전액 삭감】

- '01.7월부터 LPG 특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*을 시작하였으나,
 - * 1당 220원, 최대 월 250원(최대 월 55천원, 연간 66만원)
 - 부정수급, 상대적 고소득층인 차량보유자에 대한 편중혜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'06.8월 단계적으로 폐지기로 결정하는 대신
 - * 경증(3~6급)은 '07.1월부터 기폐지, 중증(1~3급)은 '10.1월부터 폐지
 - **장애수당을 대폭 인상**하여 LPG보조금 손실분을 장애수당 인상분*으로 기보전 조치
 - * ('06) 기초수급자만 월 6만원 → ('07) 기초수급자 월 13만원, 차상위 월 12만원(신규)
- 이에 따라,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장애인 LPG차량 지원을 금년말 폐지하고, 내년 예산에는 '09.12월 정산분(73억원)만 반영한 것임

【⑤ 기초생활보장급여 △649억원 삭감】

- 내년도 기초생보예산은 한시적으로 증액된 추경 대비로는 △1,173억원 감소하였으나, **본예산 대비로는 1,130억원 증액** 편성
 - **내년도 기초생보수급자*** 수는 '09추경 수준인 **163.2만명**으로 책정
 - ⇒ 금년 집행실적이 157만명 수준이나, 한시생계보호 중단 등을 감안하여 대상인원을 **충분하게 확대** 반영
 - 추경에 비해 예산이 다소 감소*된 것은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소요재원**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했기 때문임
 - * ('09본예산) 69,326억원 → ('09추경) 71,629억원 → ('10안) 70,456억원
 - **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을 통한 부정수급자 퇴출, 정확한 소득 파악에 따른 급여액 축소 등 (총 △4,500억원 수준 전망)

이 문서는 한글교편퓨터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.
한글교편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(www.hearsoft.com)

【⑥ 긴급복지 △1,000억원 삭감】

-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(529억원)은 **금년도 집행실적***을 감안하여 충분한 소요** 반영 (금년 본예산(515억원) 대비 2.7% 증액)
 - * 9월말 기준으로 484억원이 집행되었으나, 금년에만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실적.휴폐업자에 대한 집행액 71억원 제외시, 본예산 515억원 대비 80% 수준 집행
 - ** 긴급복지 : ('09본예산) 515 → ('09추경) 1,533 → ('10안) 529억원
- 내년도 경제여건이 개선될 전망임에도, 위기상황이었던 **금년도 집행 실적 수준**으로 소요를 반영한 것은 충분한 지원으로 판단
 - 과도한 증액은 예산 불용으로 귀결될 우려

【⑦ 사회적 일자리 예산 △340억원 삭감】

- 내년도 사회적 일자리 예산이 다소 감소된 것은 복지부 등 여타 부처의 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임
 - *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정책 개선방안 ('09.7월, 국가정책조정회의)
- 이에 따라 '10년 예산(안)에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일부 축소하였으나
 - 전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을 '09년보다 확대 반영하였음
 - * 사회서비스 일자리 : ('09본예산) 12,611억원, 129천명 → ('10안) 12,711억원, 140천명

【⑧ 노인 일자리 예산 △190억원 삭감】

- 노인 일자리 예산은 금년도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추경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되었으나, **금년 본예산 대비로는 10% 증액**
 - * ('09본예산) 16만개, 1,155억원 → ('09추경) 19만개, 1,432억원 → ('10안) 17만개, 1,271억원
- 노인인력개발원 지원예산은 본사 신축사업이 부지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, 관련예산을 미반영하여 축소된 것임

(억원)

구 분	'09예산 (A)	'09추경 (B)	'10예산안 (C)	증△감	
				C-A	C-B
○ 노인 일자리 사업	1,314	1,591	1,403	89	△188
▪ 노인일자리	115,512	1,432	127,131	116	△161
▪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	69	69	69	-	-
▪ 노인인력개발원 지원	89	89	62	△27	△27

이 문서는 한글교편퓨터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.
한글교편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1권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(www.hearsoft.com)

【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△1,100억원 삭감】

○ '09추경에 비정규직 사용기간(2년) 연장 또는 유예를 전제로 관련 예산 1,185억원을 반영하였으나

▪ 국회부대의견에 따른 **관련 법률이 제.개정되지 않아 추경예산액이 현재 집행 보류 중**

* (부대의견)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 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**관계 법률의 제.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.**

※ 제.개정 필요 법률

- 기간제근로자 보호법, 파견근로자 보호법 : 사용기간 연장
- 고용보험법 : 전환지원금 지급근거, 지원대상, 기간 등
-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특별조치법(제정) :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50% 감면

⇒ 비정규직법 처리방향에 대한 정치권 미합의로 금년 **예산전액 불용**이 예상되기 때문에 '10년 예산 반영은 **법적근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**

○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능력개발지원금 등 여타 비정규직 지원 사업은 '09년 대비 **58억원 증액** 반영하였음(1,863→1,921억원)

【□ 실적가정 대부예산 △3,000억원 삭감】

○ 실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실적가정 생계 안정을 위해 '09예산에 **한시적으로 반영**했던 사업임

* '09 수정예산 270억원 + '09 추경 2,730억원 → 총 3,000억원

○ 그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2차례에 걸쳐 대부요건을 완화하였으나, 11월말 현재 여전히 **집행률이 42%** 수준(1,275억원)으로 저조한 상황임

	1차 완화* (6.19)	2차 완화** (9.2)	현재 (11.30)
금 액	179억원	554억원	1,275억원
집행률	6.0%	18.5%	42.5%

* 구직등록 후 3개월 → 2개월, 소득요건 24백만원 → 50백만원

** 구직등록 후 2개월 → 1개월

⇒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와같이 **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**인 점을 고려하여 '10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임

○ 아울러, 정부는 실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기초수급자, 실업급여 확대* 등을 통해 실직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

* 기초수급자 : '09년 158.6만명 → '10(안) 163.2만명
실업급여 : '09.10월 현재 3.1조원 → '10(안) 3.4조원

【□ 기초.차상위 의료비 지원예산 △880억원 삭감】

○ 880억원 삭감내역은 ① '09.4월 추경편성시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「기초생보자 의료급여」 예산 △540억원 ② 「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」 예산 △340억원을 포함한 것으로

▪ **기초생보자 의료급여** △540억원은 '10년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명백한 오류이며, '09년 본예산 대비로 보면 816억원 증액됨

▪ **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사업**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(20%)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'09.7월부터 **본인부담분이 줄어들**(20 → 10%)에 따라 정부지원분도 **자동적으로 감액**된 것임

- 차상위계층의 부담에는 변동이 없으며 **대상인원은 2.5 → 2.6만명**으로 증가되었음

▪ '10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은 '09년 본예산 대비 **547억원 증액** 편성됨

사업명	'09년 예산		'10년 예산(안)	증감 (B-A)	비 고
	본예산(A)	추경			
합 계	35,765	36,685	36,312	547	
의료급여	34,179	35,099	34,995	816	지원대상: 1,692 → 1,738천명
차상위계층 의료비	1,479	1,479	1,139	△340	지원대상: 25 → 26천명
장애인 의료비	107	107	111	4	지원대상: 69 → 72천명
치매치료비(신규)	-	-	67	67	지원대상: 67천명

【□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예산 △50억원 삭감】

○ 내년도 예산이 △27억원 감액되었으나, 이는 **금년도 집행실적 등(금년도 불용예산액 △170억원)**을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임

* ('09예산) 16천명, 490억원 → ('10년) 15.6천명, 463억원 (* '09상반기 집행실적 15.5천명)

【□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예산 74% 삭감】

- 보육시설 지원 예산은 '09년 보다 249억원 증가하였으며, 다만 국공립 시설은 이용률 및 집행률을 고려해 감액
- 현재 보육시설은 초과공급 상태로, 이용률이 79.5%에 불과한 상황
 - 전체 보육시설 이용률 등을 감안할 때, 시설 확대보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육성*하는 것이 바람직하며
 - 이에 따라, 기존 민간보육시설의 환경 개선비 300억원을 신규 지원 (개소당 1천만원)
- 아울러, 국공립 시설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(7~80%)하여, 신축 규모를 일부 축소 조정(신축 38 → 10개소)
 - *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: ('09) 75억원(38개소) → ('10안) 20억원(10개소)

	'09년(A)	'10안(B)	증감(B-A)
【합 계】	75억원	320억원	245
▪ 국공립시설 신축	75억원	20억원	△55
▪ 민간시설 환경개선	-	300억원	300

【□ 저상버스 도입예산 계획대비 축소 반영(1,800 → 325억원)】

- '09년 442억원에서 325억원으로 축소되었으나, 향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
- 저상버스는 '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%수준(14,500대) 확충계획으로 추진중
 -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되도록 연차별 적정소요를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
 - .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('07~'11)상 '09년 이후 보급계획은 저상버스 (대량생산체계구축) 단가 인하를 전제로 수립된 점도 감안될 필요
 - . 저상버스 부품 국산화와 차량 경량화 등 한국형 표준모델 개발로 비용을 절감해 추진해 나갈 계획
 - * '10예산안 325억원은 '09 당초 정부안 255억원보다 70억원 증액된 규모

3. (방송내용) GDP 대비 복지예산의 OECD 평균이 20%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9% 수준임 ⇒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 필요

- 복지지출 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, 재정능력, 복지제도 운영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필요
 -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*를 대부분 구축
 - * 4대 사회보험 전국민 확대('00년), 기초생활보장('00년), 기초노령연금('08년) 등
 -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복지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자연적인 복지지출 소요*만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
 - * 국민연금·건강보험(GDP 대비 %, '07년 조세연 추정): ('10) 3.9 → ('20) 5.2 → ('30) 7.7 → ('40) 11.1
기초노령연금(조원, 복지부 자체 추정): ('10) 3.7 → ('20) 8.1 → ('30) 21.2
 - * 고령화율(10.3%) 동일 시점으로 복지지출 비중 비교시, 우리나라는 9.3% 수준('08년)으로, 일본 11.1%('85년), 호주 13.0%('85년) 등에 근접한 수준
 - 현단계에서는 신규 복지제도의 확대보다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복지 지출 효율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
- 다만,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내년도 복지예산에 최우선을 두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(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26.2% → 27.8%)

【보도내용】

- 정부는 '10년 4대강 사업은 3.5조원이라고 이야기하나,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4대강 예산은 8.5조원이라 보도

- * 국토부, 농식품부 등 4대강 사업비 5.3조원
보 건설 등에 소요되는 수공 참여 사업비 3.2조원

【기획재정부 입장】

- '10년 4대강 사업비는 국토부 소관 총 6.7조원이며, 재정에서 3.5조원, 수공에서 3.2조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임
 -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등과 농식품부의 저수지증고 등의 사업은 기존에 추진중이던 사업이어서 4대강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음
- 수공이 3.2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국가와 공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일반적 사업추진 형태의 하나로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음
 - 수공의 사업참여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고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
 - 수공이 재정투자를 보완함으로써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 완공하는 효과가 있음